

Barun ICT 11 November KOR newsletter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는 다양한 ICT 관련 사회 현상 연구를 통해 바람직한 사회적 대안을 모색합니다. 빠른 IT 보다는 바르고 건전한 IT 문화 구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세계적인 수준의 융합 ICT 연구소를 지향합니다.

BARUN ICT Events

영유아 디지털 과의존 예방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후원하고, 국회의원 김경진(민주평화당), 국회의원 김성수(더불어민주당),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가 함께 주최하는 ‘영유아 디지털 과의존 예방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다가오는 11월 8일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영유아 디지털 과의존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전문가들이 모여 영유아의 스마트폰 과의존 현황과 대응방안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이다.

주제발표에서는 영유아의 스마트폰 과의존 현황 및 대응방안(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정윤경 교수)에 대해 살펴보고, 대표적 사례로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한 ‘스마트 키즈존’ 프로그램(미디어미래연구소 전주혜 팀장)이 소개될 예정이다. 패널토론에서는 정부/공공 분야(최두진 한국정보화진흥원 디지털문화본부장), 의료계(김교룡 연세아이웰소아청소년과의원 전문의), 언론계(SBS 스페셜 강범석 PD, 스마트폰 전쟁: 내 아이를 위한 스마트폰 사용설명서 연출), 학계(총신대학교 중독재활상담학과 조현섭 교수) 등 실전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참가 신청 및 세부사항은 바른ICT연구소 홈페이지(<http://barunict.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당일 현장 등록도 가능하다.

영유아 디지털 과의존 예방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영유아 디지털 과의존 이대로 좋은가

2018년 11월 8일(목)
14:00~16:00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제발표 1	영유아의 스마트폰 과의존 현황 및 대응방안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정윤경 교수	토론	좌장 김범수 연세대학교 바른 ICT연구소 소장
주제발표 2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한 "스마트 키즈존" 프로그램 개발 미디어미래연구소 전주혜 팀장	토론자	정윤경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전주혜 미디어미래연구소 팀장 최두진 한국정보화진흥원 디지털문화본부장 김교룡 연세아이웰소아청소년과의원 전문의 강범석 SBS스페셜 PD 조현섭 총신대학교 중독재활상담학과 교수

주최: 국회의원 김경진(민주평화당), 국회의원 김성수(더불어민주당),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IA 한국정보화진흥원
문의: 02-2123-6694 | conference@barunict.kr | www.barunict.kr

한편,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는 2015년 말 ‘스마트 폰 바른 사용을 위한 대토론회’를 시작으로 스마트폰 과의존을 연구하고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왔으며, 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심 문화운동본부에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제 9회 아시아 미래포럼 가짜 정보 이슈와 식별, 그리고 대응



지난 10월 31일,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김범수 소장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드래곤시티호텔에서 개최된 제9회 아시아미래포럼에 참가했다. 아시아미래포럼은 ‘번영과 지속가능성 사이의 균형 찾기’라는 취지 아래 2010년 이후 지금까지 아시아 국가들이 당면한 공통 과제를 살펴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지식네트워크의 허브로 자리매김해 왔다.

김범수 소장은 ‘디지털 환경의 정보 식별성과 소비자 주권 & 휴먼테크놀로지 어워드’ 세션에서 ‘가짜 정보 이슈와 식별, 그리고 대응’을 주제로 한 발제와 토론을 통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짜 뉴스(Fake News)의 특징과 유형, 탐지 기법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뉴스의 생산 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뉴스를 소비하는 행태 역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뉴스의 생산 및 소비가 기존의 언론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소셜 미디어에서도 이루어지면서 가짜 뉴스가 새로운 미디어플랫폼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된 2016년 미국 대선기간의 가짜뉴스 통계에 따르면¹, 2016년 8월부터 선거일까지 페이스북을 통한 가짜 뉴스의 확산 빈도는 약 871만 건으로 진짜 뉴스의 약 737만 건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김범수 소장은 가짜 뉴스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현재 나와 있는 가짜 뉴스 탐지 기법을 비기술적 접근과 기술적 접근으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카이스트 차미영 교수 연구팀의 ‘집단지성 기반의 가짜 뉴스 탐지 기법’ 연구를 소개했다. 그리고 바른ICT연구소가 적재적소의 연구 지원을 통해 당면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끝으로, Fast-Checking을 비롯한 기존의 가짜 뉴스 탐지 기법이 가진 한계점을 설명하고, 다우존스 봇(Bot) 가짜 뉴스 소동과 오바마의 딥페이크 영상 사례에서와 같이 텍스트 기반의 가짜 뉴스가 이미지/음성/영상 조작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그러한 흐름에 대비한 선제적 정책 마련과 탐지 알고리즘 관련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가짜 뉴스에 대해 정부/기업/시민단체 등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향후의 협력 방향을 제시하면서 끝을 맺었다. 

출처: [1] 버즈피드, <http://www.buzzfeed.com>

기업의 ICT투자가 고용없는 성장을 이끄는가

정우진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연구교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강조해 왔던 일자리 창출 공약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우리나라는 8년만에 최악의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이 진행중이다. 2018년 한국은행 실질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 자료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해보면 산업 성장에 따른 고용 비율을 나타내는 고용 탄성치(취업자 증가율 / 실질GDP증가율)은 올해 2분기에 0.132로 2010년 1분기 0.074를 기록한 후 33분기(8년 3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전세계 각 국에서 고용 없는 성장의 공통적인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바로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의 발전이다. 미국 노동부 장관을 지낸 Robert Reich는 “ICT산업의 발전으로 제조업 고용이 줄어들어 미국 중산층 붕괴로 이어졌다.”고 주장하였고, 한국의 한 전직 대통령도 “ICT발전은 고용 창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발언하기도 하였다. 학계에서도 ICT가 노동생산성을 증대시켜 ‘고용 없는 성장’현상을 심화시킨다는 주장이 제시된 바 있다(Riffkin 2005). 반면 ICT가 새로운 고용을 창출한다는 연구도 다수 존재해 왔다(Brouwer et al. 1993; Harrison et al. 2005).

본 연구는 앞서의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기업차원의 [ICT투자] - [고용] - [성과] 간의 관계를 매개효과분석을 통해 과연 ICT투자가 고용 없는 성장을 이끄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ICT투자] - [고용] - [성과] 간에 완전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즉, 기업이 ICT투자를 늘리면 기업의 고용이 증대되고 이를 통해 기업이 성장한다는 것을 실증으로 증명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ICT를 ‘고용 없는 성장’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해 왔던 기존 연구들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ICT투자가 오히려 고용을 창출시켜 기업의 성장을 이끄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현재 국내 경제상황을 고려해 볼 때 기업성장을 위한 고용 증대방안으로 기업의 ICT투자 확대가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한다. 또한 본 연구는 [ICT투자] - [고용] - [성과] 간의 관계를 기존의 개별적인 관계로 분석한 것과 달리 통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각 요인의 인과 관계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출처: [1] Brouwer, E., Kleninknecht, A., and Reijnen, O.N. (1993), “Employment Growth and Innovation at the Firm Level”, Journal of Evolutionary Economics, Vol. 3, pp. 153-159.
 [2] Harrison, Jaumandreu, Mairesse & Peters (2005). “Does Innovation Stimulate Employment? A Firm-Level Analysis Using Comparable Micro Data on Four European Countries.” MPRA paper, Munich: University Library of Munich. industries: an exploratory analysis”, Journal of Econometrics, Vol. 65, pp. 9-43.
 [3] Riffkin, Jeremy 저·이영호 역 (2005). 「노동의 종말」. 서울: 민음사

인터넷 뉴스/토론 게시판의 댓글·게시글 작성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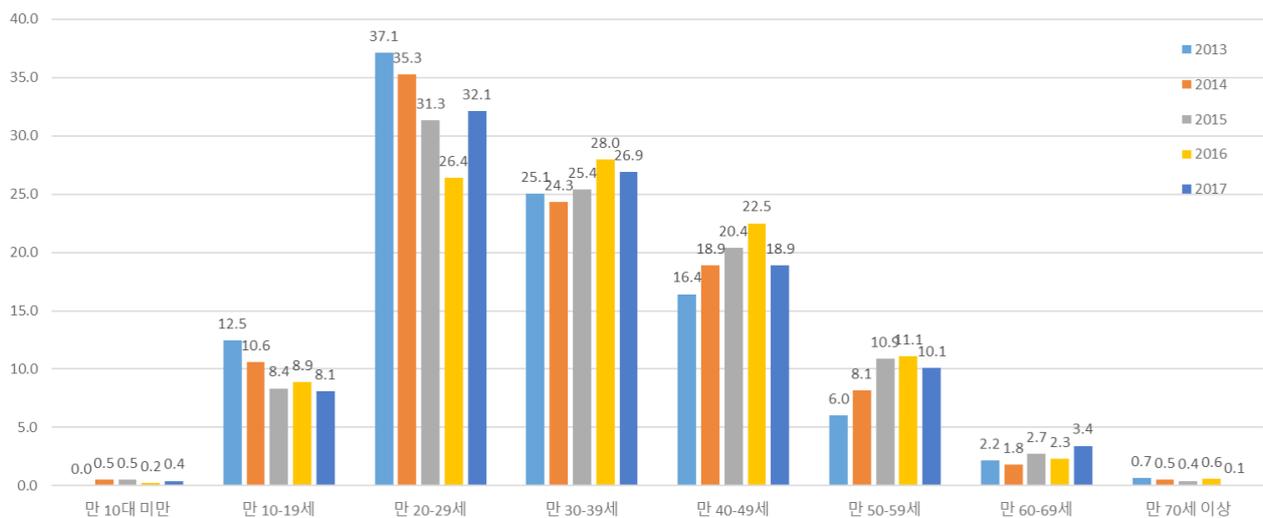
오주현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연구교수



바른ICT연구소 오주현 연구교수가 기고한 ‘인터넷 뉴스/토론 게시판의 댓글·게시글 작성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글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 STAT Report 18-18호에 게재되었다. 본 리포트는 한국미디어패널 데이터 중 동일한 척도를 사용한 2013~2017년 자료를 활용하여 인터넷 뉴스/토론 게시판에 댓글·게시글 작성 경험자와 미경험자의 인구통계학적 분포와 특성을 시계열로 살펴보았다.

분석 내용에 따르면, 10대와 20대의 댓글·게시글 작성 비율이 감소한 반면, 베이비붐 세대로 추정되는 50대의 인터넷 쓰기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댓글·게시글 작성자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낮은 가운데 특정 연령대나 학력, 직업군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은 인터넷 사용자들이 댓글·게시글을 읽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비판적 이해와 사고능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연령대별 인터넷 뉴스/토론 게시판 댓글·게시글 작성 빈도 (단위:%)

ICT를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김희영 링크투 대표, 백석예술대학교 겸임교수, 고려사이버대학교 외래교수
 송성룡 링크투 이사, 법무부 법교육 전문강사



정보시대의 고도화와 함께 우리 사회는 현재 그 속도를 아찔하게 체감할 정도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그리고 다음 세대의 모습을 예단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현 시대의 우리에게서는 우리 사회의 행복 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을 가치 있는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시켜 타인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목적에 이르는 과정은 당연히 시대의 변화에 맞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미래사회에는 암기를 통한 지식의 축적 보다 다양한 문제해결에 응용하기 위해 지식을 조합하고 상황의 맥락을 이해하여 지식을 응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미래의 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이 규격화된 교과과정을 기반으로 하여 주입식 교육방식과 일률적인 기준에 따른 획일적 평가방식이 아니라, 교과과정의 개별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교사는 개개인의 학습을 지원하는 역할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인공지능 등을 통한 효율화의 결과 미래사회가 지금처럼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은 과거 산업혁명 시기에서 부터 있어 왔던 유사한 우려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미래를 예측했을 때, 미래에는 단순하고 반복된 노동이 획기적으로 감소하는 대신 더 고급화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더불어 그러한 수요에 맞춰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과학 기술에 대한 지적 발전과 동시에 사회적 관계와 정치제도에 대한 인류의 지적 발전은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이루어 낸 다양한 부분의 경제적 성과를 사회 전체가 골고루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미래의 교육을 논함에 있어 ICT를 기반으로 한 교육이 엄청난 교육효과를 발휘할 만능의 도구라는 환상을 가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교육방법이 ICT를 기반으로 하든, 전통적인 방식에 의하든 간에 미래사회가 원하는 창의 융합형 인재는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을 더 넓게, 더 깊게, 더 유연하게 이해하고, 타인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기본적인 바탕으로 하는 인재이다. 이러한 인재의 양성을 위해 기초과학과 인문학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인공지능이나 정보통신기술은 세상을 이해하는데 있어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게 해주는 유익한 도구이긴 하지만, 도구 그 자체에 몰입하여 교육의 진정한 목표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의 평가나 피드백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경우 그것을 유익한 참고자료로 삼더라도 그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인공지능을 통해 분석된 결과에 따라서 교수자가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가능성에 대하여 선입견이나 편견을 갖게 될 우려도 제기되는데, 분석의 근거가 되는 자료가 아무리 많다 해도 개개인이 지닌 무한한 가능성과 가치는 인공지능으로 온전히 분석될 수 없다. 아무리 세상이 급변하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첨단산업이 등장하여도 여전히 전통적인 제조업이나 단순하고 반복적인 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들도 각자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사회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새로운 교육 역시 미래를 개척하고 지속적인 사회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에는 과거와 다르지 않다. 다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고자 하는 인재를 위한 교육은 지금까지와는 조금 차원이 다르게 인간의 능력을 배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앞서 지적한 바와 같다. 언제나 교육은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며, 미래의 주역은 바로 잘 교육된 인재의 것임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 🌐

시니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접근-역량-활용-위험관리” 프레임워크 제안

김범수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소장, 정보대학원 교수

지난 9월 27일(목), ‘시니어계층의 디지털정보 격차로 인한 금융 소외 실태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제1차 시니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회 정책포럼’이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바른ICT연구소 김범수 소장은 패널토론에 참가하여 시니어 디지털금융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현재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접근법이 ‘접근-역량-활용’의 3단계에서 나아가 금융사기 예방 및 대처방안을 포함하는 ‘접근-역량-활용-위험관리’의 4단계 프레임워크가 필요함을 제안했다. 그리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대학생 보다는 동년배 시니어에 의한 교육이 효과적이었음을 설명했다. 또한, 한두번의 대형강의식 수업 보다는 노년층의 눈높이에 맞는 개인별 또는 소규모의 지속적인 교육 활동을 추천했다. 더불어 디지털 격차의 완화를 위해서는 정부 및 공공 기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발표에서는 바른ICT연구소에서 발표한 통계실태조사가 다수 인용되어 눈길을 끌었다. 



2018 글로벌 ICT 표준 컨퍼런스

- 4차 산업혁명의 D.N.A(Data·Network·AI) ICT표준으로 설계하다.

이종호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연구교수



바른ICT연구소 이종호 박사는 지난 10월 4-5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개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최하고 국립전파연구원(RRA)을 비롯한 5개 기관에서 주관하는 2018 글로벌 ICT 표준 컨퍼런스(Global ICT Standards Conference 2018)에 참석했다. 본 행사는 글로벌 ICT 표준화 동향과 국내 ICT 표준화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서,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5G, AI, IoT 등의 글로벌 표준화 현황과 성과를 살펴보고, ICT 표준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세부적으로, 1일 차에는 ITU(국제전기통신연합) 이재섭 표준화 총국장이 기조강연을 통해 ICT 분야에서 표준화의 중요성을 설명했으며, 2일 차에는 IEEE(미국 전기전자학회) 산하 표준협회 Karachalios 사무총장이 ICT 개발과 활용에 있어 윤리적 접근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전체 세션은 5G 융합기술표준, 지능정보기술표준, IoT 융합산업표준, 표준개발 R&D 성과발표로 나뉘는데, 5G의 개발 동향을 바탕으로 다양한 ICT 기술이 접목되어 표준화를 향하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향후, ICT 산업의 핵심 기술이 될 5G 네트워크 분야에서 경쟁보다는 세계 최초의 상용화를 위하여 통신업체 3사(SK, KT, LG유플러스)가 협력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AI, IoT, 자율주행차 등 ICT 기술들이 더욱 신속한 네트워크 속도를 필요로 하는 시점에서 빠른 표준화와 상용화는 우리가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 꼭 이루어 나가야 할 과제이다.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는 ICT 표준이 완성되고 적용된다면 다양한 스마트기기와 일상을 함께 하는 우리도 비용을 능가하는 편익을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헬스케어가 게임을 만났다!

Professor Atreyi Kankanhalli

Department of Information Systems and Analytics,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대다수 선진국이 점차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이 유망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스마트 헬스케어는 IT 기술을 보건의료에 접목하여 예방부터 진단, 치료까지 관리하는 의료 서비스를 의미한다. 많은 기업들은 스마트 헬스케어와 관련된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으며, 실제 우리 일상 생활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다. 대표적 사례로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 심박수를 측정하고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헬스케어와 웨어러블 디바이스 그리고 게임화 (Gamification)를 접목한 연구이다. 게임화란 개념적으로 문제 해결, 지식 전달, 행동 및 관심 유도 혹은 마케팅 등 게임 이외의 분야에 게임의 메커니즘과 사고방식을 접목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남자화장실 소변기에 설치된 ‘강한 남자 찾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것은 소변기에 장착된 센서를 통해 소변의 양과 세기를 측정함으로써 앞서사람과의 스코어를 경쟁하는 게임으로 변기 밖으로 튀어나가는 소변의 양을 상당량 줄여주는 효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게임화를 접목한 어플리케이션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사회비교이론(Social Comparison Theory)의 내용을 바탕으로 나이키 플러스 사용자들이 어플리케이션의 대쉬보드에 보여지는 다른 사람의 기록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가설을 세우고 실증분석 과정을 통해 검증해 보았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의 태도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안내 하는 육체적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사용자 느낌으로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기록은 또 다른 환경적 요인인 인지된 경쟁환경(Perceived Competitive Climate)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사용자의 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용자들은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비교가 가능한 상황에서 경쟁 강도가 심하다고 인지하는 경우,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태도가 더욱 안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사용자들의 육체적 활동이 저하로 이어지며, 곧 서비스 사용을 중지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고려했을 때,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혹은 서비스 제공업자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경쟁 강도를 심하게 인지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회적 비교 및 사회적 지지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추가적 연구에서는, 자신보다 육체적 활동을 많이 한 친구들의 분포가 높은 경우, 본인의 육체적 활동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신보다 육체적 활동을 적게 한 친구들의 분포가 많은 경우에는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타인과의 비교가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비교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앞서의 사회적 비교 효과는 사회적 지지(자신의 활동에 대한 타인의 ‘좋아요’)에 의해 감소되는 조절효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친구들이 더 많은 운동량을 보인 경우 기본적으로 자신의 육체적 활동이 줄어들지만, 자신의 활동에 대한 지지를 더 많이 받게 될수록 자신의 육체적 활동은 덜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IT기술의 발전과 함께 헬스케어 산업에서도 새로운 기술적 흐름을 반영한 제품과 서비스가 속속 출시되고 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 및 확산 과정에서 사용자들이 보다 손쉽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헬스케어 산업의 실무자들에게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리 박재영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박사과정

“댓글, 개인 의견 변화엔 큰 영향 없어...여론 추정에 효과 있어”

투데이신문 2018.10.10

바른ICT연구소의 김보라 연구교수는 최근 진행된 온라인 뉴스 댓글 연구와 관련하여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에서 김 교수는 이번 연구를 진행하게 된 계기에 대해 “ICT의 어두운 부분을 탐구해서 기술발달 이면에 존재하는 부작용의 해소와 건강한 ICT 문화 구축이라는 연구소의 설립 취지와 잘 맞닿아 있는 주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 밝혔다.

그리고 주요 연구수행 결과로 “댓글 조작이 실제 여론을 바꾸는 힘은 생각보다 크지 않으나, 여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으며, “소수 댓글로 인터넷 사용자들의 강력한 생각의 변화를 유도하기는 어려우나 매크로를 활용해 특정 댓글의 노출빈도를 지속적으로 조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댓글 조작의 영향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후속 연구 계획에 대해 “현재 연구팀에서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뉴스와 팩트체크 시스템에 관한 실험을 준비 중이다.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632>



바른ICT연구소 "노인층 교육 수준따라 모바일 금융 이용률 최대 2배 차이"

한국경제 2018.10.15 B5면 6단

바른ICT연구소가 발표한 ‘스마트폰 이용행태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층의 모바일 금융 앱(응용프로그램) 사용시간이 학력 수준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범수 바른ICT연구소장은 노인들 사이에 정보격차 문제를 해결하려면 새로운 방식의 디지털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기존 고령층 대상의 디지털 교육은 접근-역량-활용으로 구성된 3단계 접근법을 주로 사용해 왔다. 다만, 이러한 접근법은 노인들이 겪을 수 있는 금융사기나 피싱(phishing), 금전적 피해 등의 위험을 줄이는 데 한계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험관리'를 포함한 새로운 디지털 교육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보다 효과적인 교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고령층의 디지털기기 사용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금융권에서도 고령층 금융사기 방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출처 :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01539501>





브라질 사법제도의 디지털화

Vitor XAVIER



International Student Ambassador 4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최근 브라질 최고 사법기관인 브라질 연방 대법원(STF)은 가상 공판의 도입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러한 계획은 브라질 모든 법원의 공판과정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디아스 토폴리 대법원장은 이러한 변화가 제한된 자원으로 수많은 사건을 재판해야 하는 법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으며, 현재 진행 중인 일부 소송 건들이 가상 공판을 통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법제도의 디지털화 작업은 이미 다른 몇몇 법률기관에서 도입이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브라질 연방최고법원(STJ)은 'e-Julg'라는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인데, 이 시스템을 통해 일선 판사들은 언제 어디서나 가상 공판에 접속하여 공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연방최고법원의 판사들과 법원 직원들은 e-Julg 시스템의 사용자 교육을 다음 몇 주에 걸쳐 받게 될 예정이다. IT 관계자는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이 판결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 외에도 공판 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사용자 편의를 개선하는 한편 자원의 효율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의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사법제도의 디지털화 작업은 여전히 대법원 일부 구성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마르코 아우렐리오 대법관은 가상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판사들은 표만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지 않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판결의 정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그에 따라, 가상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견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재판의 변호사나 재판관이 가상 공판을 중단하고 실제 재판이 진행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역시 검토되고 있다.

이처럼 여러 장단점을 동시에 갖고 있는 가상 공판은 향후 기술적, 제도적 보완을 통해 대부분의 재판관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디아스 토폴리 대법원장 역시 사법제도의 디지털화에 대해 민주주의 역시 정보기술,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와 함께 변화하고 있으며 사법부 역시 이러한 변화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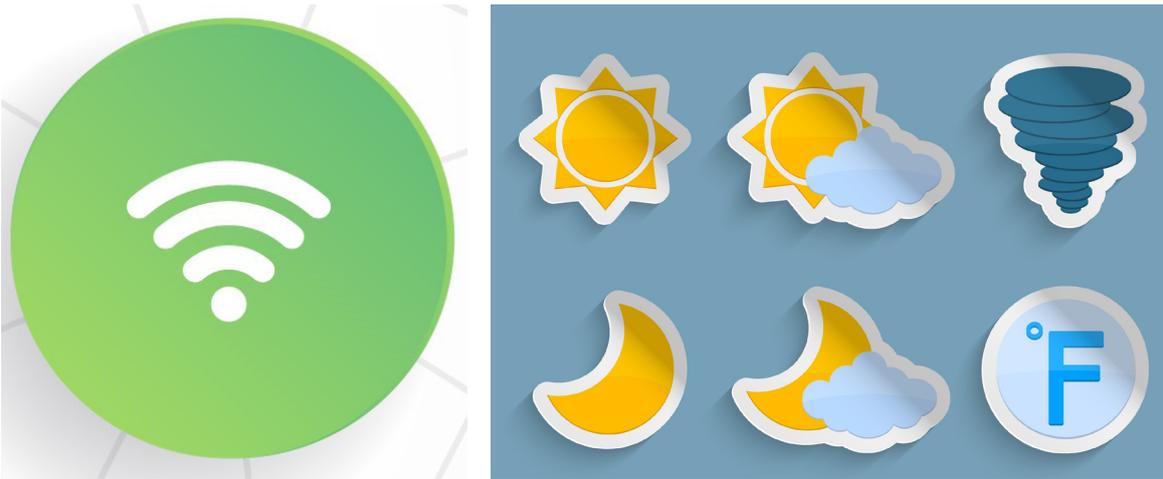
출처: [1] <http://agenciabrasil.ebc.com.br/justica/noticia/2018-09/toffoli-defende-ampliacao-de-julgamentos-virtuais>
[2] <https://www.jota.info/stf/do-supremo/marco-critica-ampliacao-virtual-anunciada-toffoli-19092018>
[3] <https://www.nexojornal.com.br/expresso/2018/05/02/Como-funciona-um-julgamento-virtual-no-Supremo>
[4] http://www.stj.jus.br/sites/STJ/default/pt_BR/Comunica%CC80o/noticias/Not%C3%ADcias/STJ-come%CC80a-a-julgar-recursos-de-forma-totalmente-virtual

기후 조기경보를 위한 르완다의 해커톤 프로젝트

Claudine UKEBEREYIMFURA



International Student Ambassador 1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사물인터넷(IoT)이 르완다의 농업 분야에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7월 24일 르완다 기상청(Meteo Rwanda)은 유엔개발계획(UNDP)과 함께 기후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에 IoT를 도입하는 해커톤 프로젝트를 마무리했다. 이 프로젝트는 “실시간 환경 데이터의 수집, 분석 및 보급”을 통해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르완다 농민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프로젝트 이전에는 환경 데이터 수집이 수동으로 이루어졌으며 농민들은 이 정보를 전화나 서류를 통해 월 단위로 받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1차 지역 정보를 전송하는 데 문제가 있었고 정보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못했다.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한 르완다 기상청은 유엔개발계획과 Noreps기구의 지원을 받아 IoT를 활용한 “르완다 기후 조기경보와 인도주의 복구 프로젝트”(Climate Early Warning and Humanitarian Recovery in Rwanda Project)를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에는 다양한 분야의 기술자, 기후정보과학자, 정부 관계자, 텀바 공과대학(Tumba College of Technology) 등이 참여했다. 르완다 기상청 직원들과 텀바 공과대학생들은 르완다 민간부문, 가나, 케냐, 도쿄대학 교수들과 Impact Hub Kigali의 기술팀으로부터 통신, 교정 및 데이터 분석, 내구성 및 보안 관리와 같은 IoT 장비에 대한 제반 기술을 전수받았고, 프로젝트의 수행을 통해 환경 데이터의 수집, 분석 및 배포를 위한 기술적 혁신을 목표로 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청년들이 모여서 사회 이슈들을 함께 고민하고 기술을 사용하여 해결책을 생각해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농업 산업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 효율성과 실시간 정보전달력을 지니고 있는 IoT의 잠재력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

출처: [1] <http://www.rw.undp.org/content/rwanda/en/home/presscenter/pressreleases/2018/press-release---hackathon-for-climate-early-warning--internet-of.html>



중국의 빅 해킹

Ho Jia Ren JAN



International Student Ambassador 1기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부

수년간 중국의 정보기술 관련 기업들은 엿보기 기능을 갖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수집된 정보는 중국 정부가 정치적 혹은 경제적 의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해서 이러한 비난이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종종 어려움이 있다. 블룸버그는 2018년 10월 4일 슈퍼마이크로사(Supermicro Computer Inc.)에 부품을 공급하는 중국의 하도급업체의 제조 과정에 중국 스파이들이 몰래 들어가 서버 보드에 해킹에 필요한 작은 칩을 설치했다는 기사를 발표해 논란을 일으켰다. 문제는 해당 서버가 애플, 아마존과 같은 미국의 기술 대기업은 물론 정부 기관에까지 판매되었다는 점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작은 칩은 날카로운 연필심처럼 작고, 일부는 신호조절 커패시터처럼 보이도록 설계되었다고 한다. 또한, 발견된 칩은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받는 장치에서 공격을 실행하는 인터넷 상의 익명의 외부 컴퓨터로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는 충분한 메모리와 처리 능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새로운 악성코드를 받아들이는 게이트웨이의 역할도 할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블룸버그는 아마존과 애플이 비정상적인 현상과 펌웨어 문제를 발견한 후 당국에 우려를 표시했으며 문제의 원인이 되는 부품의 생산지가 결국 중국의 4개 공장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주장했다. 만약 블룸버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중국이 미국을 넘어 슈퍼마이크로사와 거래하고 있는 100개 이상의 국가들로 그 영향 범위를 확장했을 것이란 예상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블룸버그가 그 동안 기술 관련 기사의 정확성에 대해 그다지 좋은 평을 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블룸버그는 지난 몇 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애플에 대한 부정확한 기사를 작성함으로써 대중들로 하여금 그들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번 블룸버그의 기사 역시 그러한 공격이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한 기술적 세부 사항이 결여되어 있고 기술 전문가에 의해 작성되거나 심사된 것도 아니었다. 기사 배포 전 애플과 아마존이 슈퍼마이크로사로부터 구입한 서버에서 실시한 보안 점검 결과를 토대로 블룸버그의 주장을 반박했지만 블룸버그는 기사의 출처를 밝히기를 거부했다.



출처: [1] <https://www.multichannel.com/blog/big-hack-or-big-hoax>
[2] <https://www.convergedigest.com/2018/10/bloomberg-big-hack.html>

지난 2015년 애플이 데이터센터에서 슈퍼마이크로사의 서버를 제거한 것과 마찬가지로 과거의 여러 사건들과 이번 기사는 세부적인 내용 면에서 일관성이 있어 보이지만, 추가적인 조사없이 해당 기사의 진실여부에 대해 결론 내리기는 쉽지 않다. 다만, 지금 당장 전세계의 기업과 정부 기관이 이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보안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

출처: [1] "The Big Hack: How China Used a Tiny Chip to Infiltrate U.S. Companies - Bloomberg." [Online]. Available: <https://www.bloomberg.com/news/features/2018-10-04/the-big-hack-how-china-used-a-tiny-chip-to-infiltrate-america-s-top-companies>.
[2] "Decoding the Chinese Super Micro super spy-chip super-scandal: What do we know - and who is telling the truth? The Register." [Online]. Available: https://www.theregister.co.uk/2018/10/04/supermicro_bloomberg/.

디지털 장의사 (Digital Undertaker), 어디까지 지워주나요?

나유진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최근 몰카(몰래카메라) 범죄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디지털 장의사’라는 직업 또한 조명받고 있다. 디지털 장의사는 일명 ‘온라인 기록 삭제 전문가’ ‘사이버 평판 관리사’로 불리며 디지털 성범죄로 유포된 촬영본을 지워줄 뿐 아니라, 개인에 대한 악의적 게시물과 댓글 등을 삭제해주는 직업이다. 지난해 한국 고용정보원이 향후 5년 내 급성장할 유망 직종으로 선정하였고, 최근에는 ‘디지털 장의사’라는 명칭의 민간자격증이 등장하는 등 준(準) 전문직으로 인정받는 분위기다.

하지만 디지털 장의사와 음란 사이트가 결탁해 수익을 챙긴다는 비난은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비공개 촬영회나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자가 사진 삭제 업무를 지정된 삭제 대행업체에 맡겨주는 식의 결탁이다. 최근 ‘비공개 촬영회’ 사건으로 인해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가 씨가 디지털 장의사 35살 박모 씨에게 삭제 업무를 맡아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기고, 박 씨는 다시 이 사이트를 통해 연결된 피해자 38명에게 돈을 받고 사진을 지워준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건뿐만 아니라 디지털 장의사 직업을 둘러싼 논란도 여전히 존재한다. 디지털 장의사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몰카 피해자 뿐만 아니라 평판에 민감한 연예인, 취업준비생 등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용 층이 다양해짐에 따라 디지털 장의사가 악용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3월 서울의 한 병원이 과거 의료사고 논란과 관련해 포털 사이트에서 연관 검색어를 지워달라는 요청을 한 사례가 있었다. 디지털 장의사가 자칫 과거의 범죄 사실 등을 ‘세탁’하기 위한 용도로 쓰일 수 있는 것이다.

디지털 장의사라는 직업은 우리 사회에 새롭게 나타난 직업인만큼 이를 뒷받침하는 직업 윤리의식과 법적 제도가 필요하다. 우선 타인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고객의 비밀유지에 만전을 기할 수 있고 자신이 맡은 일에 책임 의식이 강한 사람이 디지털 장의사에 적합하다. 또한 고객의 의뢰를 받아들이고 계약을 할 때도 윤리의식에 기반을 둔 검토가 필요하다. 범죄 기록이나 과거 세탁 등에 쓰일 수 있는 악용 여지는 없는지, 알 권리를 침해할 요소가 있는 사안은 아닌지에 대한 충분한 숙고를 거쳐야 한다. 또한 악용을 방지하고 네트워크 상 콘텐츠를 빠르게 심의할 수 있는 법적 제도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 국내 인터넷 기업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를 통해 자율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에 반해 상대적으로 대응이 미진한 해외 기업을 상대로도 불법 콘텐츠 차단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디지털 장의사’라는 직업이 우리 사회에 안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앞서 디지털 장의사가 필요 없는 사회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 지에 대한 고민이 아닐까? 🤖

커지는 IoT 보안 문제, 더 이상 사생활은 존재하지 않는 걸까?

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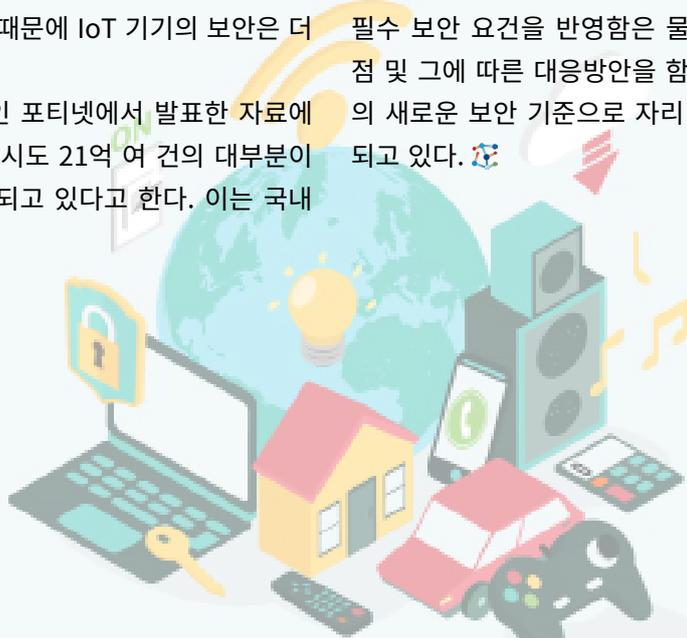
연세대학교 UIC 창의기술경영학과(CTM)

"아리아, 오늘 날씨 알려줘"... "오늘 날씨는 맑아요. 낮 최고기온은 25도이고 비 올 확률은 20%예요. 미세먼지 농도도 낮아서 야외 활동에 좋아요". 음성만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작업을 대신 수행하는 인공지능 홈스피커는 계속해서 우리 생활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 간단한 검색에서부터, 집에서 자동차 시동을 걸거나 혹은 집 밖에서 실내 온도를 조절하는 등, 사물인터넷의 영향은 우리 삶의 전반적인 형태를 변화시키고 있다. 가트너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020년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에 이용되는 기기의 개수는 약 200억대로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약 80억대로 추산되던 2017년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사람들은 아리아나 알렉사 같은 인공지능 홈스피커 혹은 기타 IoT 제품들을 구매하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싼 가격 문제도 있겠지만, 역시 가장 큰 이유는 보안 및 사생활 침해 문제이다. TechUK와 GfK의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 참여자의 23%가 IoT 기기의 구매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로 사생활권 침해를 들었고, 16%는 보안 문제를 이유로 들었다. 인공지능 홈스피커의 경우, 해커가 기기의 보안 취약성을 이용해 악성 코드를 심어 한밤 중에도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나게 하여 사용자를 놀라게 하는 등 물리적 상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IoT 기기의 보안은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글로벌 사이버 보안기업인 포티넷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네트워크 침입 시도 21억 여 건의 대부분이 웹 카메라, CCTV 등에 집중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국내

에서 운용 중인 대부분의 IoT기기가 보안 상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최근 불거진 IoT 보안 및 사생활 침해 이슈(현대자동차에서 판매된 자동차에서 운전자가 인지하고 있지 않은 자동차 운행 정보를 자동차 회사 명의로 개통된 통신망을 통해 해당 회사로 상시 전송)에서와 같이, IoT 보안은 이제 기술적 접근 뿐만 아니라 법적, 제도적 접근 역시 필요로 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IoT 보안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우리는 편리함을 위해 우리의 사생활권을 모두 포기해야만 하는 것일까? 시큐어 플래닛의 강택진 대표는 국내 IoT 대부분이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보안에 매우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해결을 위해 '시큐어플래닛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한다. 강 대표는 개별 기업은 물론이고 국가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럿이 서로 감시하면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오픈소스 보안 취약점 DB 구축을 통해 IoT 보안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한편, 최근 SK 인포섹은 내부 전문가 집단인 EQST그룹이 IoT 관련 보안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북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글로벌 사이버보안연구소에서 제시한 IoT 필수 보안 요건을 반영함은 물론, 현재까지 드러난 취약점 및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IoT 분야의 새로운 보안 기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BARUN ICT Essay Contest

본 기획 연재에서는 바른ICT연구소가 개최한 에세이 공모전에서 당선된 Best Essay를 매달 한편씩 소개한다. 에세이는 영문으로 쓰여진 원문을 그대로 수록하였다.

Legal Frameworks for Privacy - Why Bother?

Written By Eun Sol Kim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Yonsei University ('16)



Freedom of Expression versus Protection of Privacy, which do you prioritize more?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hold very different views on which to prioritize, and this has led to the understanding that everyone is different. Before, I was always cautious of my activities online. I would deliberately not sign up for social networks such as Twitter, Facebook, and Instagram because I did not enjoy exposing myself and my information to others. However, after entering college, I could not socialize with my friends without these social networks. They were so integral to our lives that without it would make you seem like an outsider. Therefore, I was to sign up and to constantly update on my daily lives. This is the reality today, we cannot live

without the use of technology and social media. But this brings along sacrifice of our privacy because we are exposing ourselves online to everyone including people we do not know. As much as we cannot prevent the use of technology today, we cannot expect our privacies to be protected as well. Three authors, Glenn Greenwald, Andra Giurgiu, and Jamie Lee Williams recognize technology as a threat to privacy and discuss the need to implement legal norms in order to prevent a world where everything will be censored.

The commonality between Greenwald, Williams, and Giurgiu is that they are all concerned about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this digital era. Their definitions of privacy seem similar to Richards's definition of privacy, which is "rules ... for managing the collection, use, and disclosure of inform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ir opinions and arguments are all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our privacies are not protected as we are constantly being watched by others. Our private information is exposed and very much being misused. They come to the same conclusion that legal frameworks are needed but Greenwald indirectly implies while Giurgiu and Williams are more direct.

Greenwald indirectly argues for the need for legal frameworks in society by pointing out the level of exposure of our information and surveillance today. He claims that we, as human beings, all have something to hide and constant monitoring dramatically reduces our range of behavioral options. Sometimes, we voluntarily publish personal information online because we have a need to let others know. But he equally emphasizes that we need to be free of the judgmental eyes of others. Internet has brought us to indiscriminate surveillance today and he stresses that if we conform and submit to this society, our freedom will be "severely crippled". Through Greenwald's emphasis on the problems with the technological advancements, he implies that we must not let these advancements take control over



us and asks for actions to be taken to allow people to act freely without the worry of others' expectations.

On the other hand, Giurgiu and Williams both discuss the problem of privacy in legal means, directly asking for legal frameworks to be made for protection of privacy. Giurgiu explains the complexity of discussing privacy in the technology world because we, on both the national level and the individual level, hold different definitions. He focuses on a specific principle called Right to be Forgotten and questions the effectiveness because it is merely re-named from the "already existing data principles and Right to Erasure". He argues that there is too much ambiguity "in the context of its blurry regulation", especially in his example of Facebook. Likewise, Williams also directly stresses that "[d]espite the fact that the Internet of Things implicates massive amounts of private data about our daily lives, there is currently no legal framework demanding good security and privacy protections". The three authors' emphasis of the technology's threat to privacy and the need for legal norms led me to wonder whether the existence of legal norms could actually be beneficial in today's society.

Although I agree that our personal information is being misused and that we can easily find our personal information floating around on the internet today, I am curious if the implementation of legal frameworks to protect our privacies would actually solve the problem. We are very much aware of the invasion of privacy today and have attempted to implement stronger regulations for protection. However, the fact that we still do not have a clear set of rules that effectively protect privacy after all these years indicates that we must accept the reality and find an alternative way to solve this problem. Even if there is, like Giurgiu claims, Right to be Forgotten is just a re-phrased existing principle. The author admits that the current principles face limited applicability, especially in the example of Facebook. Therefore,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there are already existing laws at hand, these laws are not efficient enough to solve the problem of privacy in an international scale. There are already cases that deal with the problem of privacy between nations and we are unable to come to a consensus because of the different perceptions. Because it is heavily related to a nation's religion, philosophy, we cannot force them to give up and come to universal consensus. Therefore, especially after reading about the legal shortcomings to protect our privacy, I believe the solution lies in our attitude. We must not view invasion of privacy as a threat in the future but as a chance to stand up for who we really are and practice Freedom of Expression.

We can no longer deny the fact that privacy is being invaded as a lot of personal information are already online and can be easily found. The lack of privacy has given others the power to easily track one's digital footprints and to use the data for other purposes. But if our ways of protecting privacy has shown no noticeable progress so far, I think we must accept the reality and find another way to fight for freedom of expression. If privacy does disappear, we do not necessarily have to stay quiet and control our behaviors. Instead, we can speak up for ourselves more actively because we have nothing to hide. In cases of illegal acts, they must be known to the public and be punished for. But things such as personal preferences should be respected. Therefore, we can more actively practice Freedom of Speech and Expression if we accept the fact that we cannot do much to protect our privacies in the online world. It will not only



BARUN ICT Essay Contest

allow us to live as who we truly are but also lead our society to become more acceptive of human diversity.

In conclusion, I am aware of the concerns that authors Greenwald, Williams, and Giurgiu hold regarding the threat to privacy and implications technology brings. However, we must accept the reality that it is hard for us to come to a consensus on the legal frameworks and that an alternative solution is needed. Therefore, I believe that our change of attitude towards privacy may lead to a more truthful society where we no longer have to hide and privacy is no longer needed. 🌐

References

Giurgiu, Andra. "Challenges of Regulating a Right to be Forgotten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Facebook."

Masaryk University Journal of Law and Technology, <https://journals.muni.cz/mujlt/article/view/2641/2205>.

Greenwald, Glenn. "Why Privacy Matters.", TED: Ideas Worth Spreading, 2014, https://www.ted.com/talks/glenn_greenwald_why_privacy_matters?language=en.

Richards, Neil M. "Four Privacy Myths." A World without Privacy: What Law Can and Should Do?, edited by Austin Sarat,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2015, pp. 33–82. Social Science Research Network, 2014, https://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2427808.

Williams, Jamie Lee. "Privacy in the Age of the Internet of Things". Human Rights. 2016, Vol. 41 Issue 4, p14-22. 4p.



Alexandra Stephenson
International Student Ambassador 2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 본 연구소에서 제공되는 바른ICT뉴스레터는 국내외 우수 ICT 연구 동향 및 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 바른ICT뉴스레터를 정기적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news@barunict.kr 로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Publisher 김범수 | Editor-in-Chief 김보라, 구윤모 | Editor 장윤희 | Designer 이예은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302동 연세·삼성학술정보관 720호
02-2123-6694 | www.barunict.kr

